

주요 내용

■ 국제 유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 가중 ■

□ 설문조사 개요

- 7대 도시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507명을 대상으로 국제 유가의 급등이 가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함

□ 설문조사 결과

- (물가 전망)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200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
- (휘발유 가격의 심리적 마지노선) 휘발유 값이 현 가격 대에서 리터당 100원 인상될 경우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38.9%에 달함
- (전력 요금의 심리적 마지노선) 전력요금이 현재보다 10%만 올라도 전체 응답자 중 58.8%가 본격적으로 전력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답함
- (가계 생활비 부담) 대다수 국민이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처 방안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(61.3%)이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9.2%, 외식비, 문화 교육비 등 다른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한 경우가 42.8%, 불황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1.4%로 조사됨
- (정부 정책) 국민들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경제 주체 중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 유가를 인상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.8%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반면, 많은 국민들은 정부의 승용차 5부제 또는 10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
□ 평가 및 시사점

- 많은 국민들이 개별 가계 단위에서의 절약과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 등에는 수긍하는 반면 국제 유가를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가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따라서 정부는 고유가를 가계에 전가시키는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임

국제 유가 급등으로 가계 부담 가중

설문조사 개요

조사 시기	2000년 9월 14~15일
조사 대상	7대 도시(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인천, 울산) 만 20세 이상 일반 국민 507명
조사 목적	국제 유가 급등 관련 일반국민 여론조사
조사 방법	무작위 추출에 의한 전화 설문

설문조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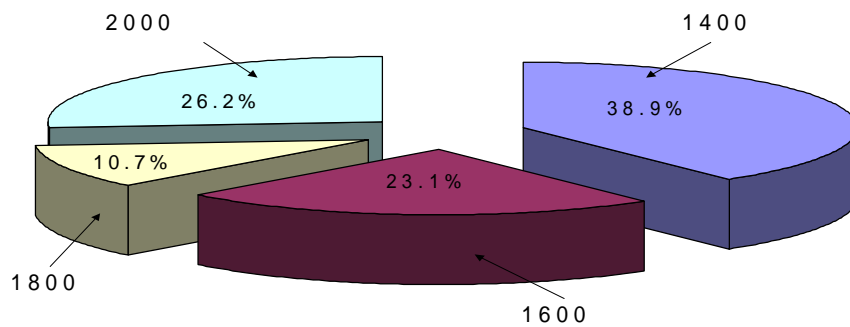
- (물가 전망)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200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% 이상이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6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2001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%가 될 것으로 전망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4% 이상 될 것이라고 답한 국민이 59.4%에 달했으며 6% 이상이 될 것이라고 답한 경우도 24.1%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
- 가계가 체감하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전망치(연 3%대)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들어 지표 물가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는 공공요금(56.4%)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외에 공산품(19.1%), 집세(8.9%), 개인서비스요금(8.7%), 농축수산물(6.1%) 순인 것으로 조사됨

< 200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>

	(%)				
	2~3%	3~4%	4~5%	5~6%	6% 이상
응답 비중	13.8	25.8	23.9	11.4	24.1

- (휘발유 가격의 심리적 마지노선) 휘발유 값이 현 가격대에서 리터 당 100원 인상될 경우 승용차 운영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38.9%에 달함
 - 휘발유 가격이 리터 당 몇 원 정도면 승용차 운영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1,400원(현재보다 100원 인상) 정도면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38.9%에 달했으며 1,600원 정도일 경우 23.1%, 2,000원 이상이 되어야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26.2%로 나타남
 - 휘발유 가격이 2000원 이상이 되어야 승용차 운영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26.2%에 달한 것은 소득 양극화로 휘발유 가격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매우 비탄력적인 계층이 있음을 시사함

<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게 되는 휘발유 한계 가격 >



- (전력 요금의 심리적 마지노선) 전력요금이 현재보다 10%만 올라도 전체 응답자 중 58.8%가 본격적으로 전력 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답함
 - 전력 요금이 현재보다 몇 % 정도 오르면 본격적으로 전력 사용을 자제하겠느냐는 질문에 현재보다 10% 오르면 자제하겠다는 응답자가 58.8%에 달했으며 20%가 올라야 전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20.9%, 30% 이상이 되어야 자제하겠다는 응답이 19.7%로 조사됨
 - 이는 정부가 가정용 전력 요금을 20%에서 많게는 50%까지 인상시키려는 방침이 가계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함
- (가계 생활비 부담) 대다수 국민이 유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대처 방안으로는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

- 유가 상승으로 가계 생활비가 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.7%에 불과했으며 10%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0%를 넘는 것으로 조사됨
-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기,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응답(61.3%)이 가장 많았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29.2%, 외식비, 문화 교육비 등 다른 생활비를 줄이겠다고 한 경우가 42.8%, 불황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11.4%로 조사됨

< 고유가 대처 방안 >

(%)

	별 다른 대책 없다	대중 교통 이용을 늘리겠다	전기, 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	불황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리겠다	외식비, 문화, 교육비 등 다른 생활비를 줄이겠다
응답률	9.5	29.2	61.3	11.4	42.8

주: 복수 응답 2개 가능

- **(정부 정책)** 일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경제 주체 중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 - 정부의 유가 정책과 관련, 정부의 고유가 대책이 어느 경제 주체에 가장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72.4%로 기업(19.9%), 정부(6.9%)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
 - 한편,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어느 경제 주체가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(68.8%), 기업(20.7%), 가계(9.1%) 순으로 나타남
 - 또한 국내 유가를 인상시켜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73.8%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국제 유가를 국내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
- **(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)**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승용차 5부제 또는 10부제 실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

- 유류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승용차 운행을 줄이자는 정책에 대해서는 14.4% 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승용차 5부제 또는 10부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답한 경우가 46.2% 이며 10부제 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한 경우가 38.7%, 5부제와 10부제 둘 다 반대한다고 한 경우가 14.4%로 조사됨

< 승용차 운행 정책에 대한 견해 >

(%)

	5부제를 실시해야 한다	10부제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	5부제와 10부제 둘 다 반대한다	모름/무응답
응답률	46.2	38.7	14.4	0.8

- (저축) 고유가, 물가 상승,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67.7%가 늘리기 어렵다고 답함
 - 저축을 늘리신다면 현재보다 몇 % 늘릴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늘리기 어렵다는 응답이 67.7%로 가장 많았으며 10% 늘리겠다는 응답이 23.7%, 20%가 6.7%, 30% 이상이 2.0% 인 것으로 조사됨
 - 저축을 늘릴 경우 저축 방법으로는 은행 예금(87.8%)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은행 신탁(6.5%), 부동산 투자(2.8%), 주식 투자(2.0) 순으로 나타남

평가 및 시사점

- 많은 국민들이 개별 가게 단위에서의 절약과 승용차 운행 제한 조치 등에는 수긍하는 반면 국제 유가를 에너지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는 가게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따라서 정부는 고유가를 가게에 전가시키는 단기적인 대책에서 벗어나 범정부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임

(조성원 연구위원 sucho@hri.co.kr ☎ 3669-4020)